

KTX 열차 운행도 경부·호남 '차별'

평일·주말 경부축이 호남축보다 2배 가량 더 운행... 명절에도 경부축에만 일반 KTX 집중 편성 민주 이춘석 의원 "수요 차이가 있더라도 운행 편성 차이 너무 심해... 또 다른 지역적 차별" 지적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KTX 운행 편성에 있어서도 경부축 노선과 호남축 노선 간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노선별 KTX 편성 현황'에 따르면 2024년 8월 기준 평일 KTX 경부축에는 161회 운행하는 반면, 호남축에는 80회 운행 중이다. 주말에는 경부축이 195회, 호남축은 92회와 같은 평일과 주말 간 배차 차이임에도 경부축에 34회 추가 배차될 때 호남축은 2회 추가된 것에 그쳤다.

열차 편성은 경부축과 호남축 간 평일 7회, 주말 103회 차이가 났지만, 실제 최대 탑승 가능한 좌석 수는 평

일 6만6,883석, 주말 8만9,873석까지 차이가 났다. 이러한 차이는 경부축에 투입되는 열차가 수송 가능 인원이 더 많은 KTX-1(일반 KTX)이 KTX-산천보다 더 많은 반면, 호남축에 투입되는 열차는 KTX가 상대적으로 수송 인원이 적은 KTX-산천보다 적거나 동수로 편성되기 때문이다. 각 차종별로 일반 KTX는 20량 1편성으로 좌석수가 955석이며, KTX-산천은 10량 1편성으로 379석~410석, KTX-청룡은 8량 1편성으로 515석이다.



명절에도 이러한 차이는 계속됐다. 올해 추석 경부축에 편성된 열차는 총 1,208회인 반면, 호남축에 편성된 열차는 580회였다. 차종도 경부축에는 일반 KTX가 794회, KTX-산천이 390회로 2배 이상 더 배차했지만, 호남축에는 일반 KTX가 276회, KTX-산천이 304회로 일반 KTX를 KTX-산천보다 덜 배차했다.

경부축에만 일반 KTX를 집중 배차한 결과, 올해 추석 경부축에 편성된 좌석수는 92만4,290석, 호남축에 편성된 좌석수는 38만3,356석으로 54만934석 차이가 났다.

이춘석 의원은 "아무리 수요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경부축과 호남축 간 KTX 운행 편성 차이가 너무 심하다"

라며 "주말과 명절에는 이러한 차이가 더 심하게 지면서 호남사람들은 매년 '예매전쟁'에 시달린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춘석 의원은 "경부축에 다니는 횡수도 많지만, 경부축에만 상대적으로 수송 가능 인원이 더 많은 일반 KTX를 KTX-산천보다 더 많이 투입하면서 실제 탑승 가능한 좌석수 차이는 더 커진다"라며,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표현이 딱 적용되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KTX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SOC인데 이런 불편을 받쳐주는 것이 또 다른 지역적 차별"이라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김승일 김제시의원

민주 장애인위원장 출마

김승일 김제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국장애인위원회 위원장 선거에 지난 8일 입후보했다.



김 의원은 만 41세 청년이고 선천적 뇌성마비 2급으로 부모님 모두 중증 장애인이며, 외상환자인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15년간 모셨고 현재는 투석 환자인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생 시절에는 기초생활 수급자로 10년 넘게 어려운 경제 상황을 이겨내고 로스쿨을 졸업하고, 학원을 운영하며 청년들과 지역에서 700시간이 넘는 봉사활동을 보육 기관과 발달 장애인 기관 해오다 21년 4월 보결선거에 당선되어 제8, 9대 김제시의원을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의정 활동기간 동안 <특수학교 설립 추진>, <반대매 체육시설 설치 지원> 등을 해왔고, 김제시의 신장 장애인 지원 조례, 관광 약자 지원 조례,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조례 제정 등 장애인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김 의원의 공약으로는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의 20퍼센트 이상 당선권 공천 △전국 특수학교 설치 등이 있으며, 정책으로 승부를 보려 하고 있다.

/김제=박노태 기자

도의회 교육위, 현장의정활동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정형석)는 이달 제414회 임시회 기간 중 지난 11일 진안교육지원청의 현안 사업 진행 상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한국한방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상황과 시설 현황을 둘러보는 현장의정활동을 진행했다.

의원들은 먼저, 진안교육지원청이 특색사업으로 진안군, 유관기관 및 지역 주민들과 협력해 추진 중인 '진안 교육 협력 지구 모델 구축 공모사업'의 세부 내용을 점검했다.

교육 협력 지구 사업은 교육청과 지자체가 1:1 대응투자를 통하여 해당 지역의 특색에 맞는 지역교육공동체를 구축하고, 지역 교육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의원들은 △진로·진학 박람회 운영 △학습지도 관심 학부모 및 지역주민들을 활용한 마을 기초학력 지도 강사 양성 △트릭 교원을 활용한 교육봉사단 운영 △진안군의 인적·물적 지원을 활용한 마을 체험처 발굴 등 진안교육지원청의 다양한 노력들을 격려했다.

한국한방고로 자리를 옮긴 의원들은 1969년 건축된 노후 본관동의 개축 공사 예정 부지를 둘러보고, 2026년 6월 준공 완료까지 학생 등 안전사고 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이만호 기자



전국체전 출전 선수단 격려

지난 11일 경상남도 김해시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에 김관영 도지사가 선수단 및 자원봉사자들을 응원하고 있다.

"도민 자긍심 회복토록 요구사항 적극 반영을"

민주 이성운 의원, 법무부 국감서 전북 현안 건의... 도내 청년 인구유출 심각성 등 거론

더불어민주당 이성운 의원(전주을)이 최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박성재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지역현안 해결을 촉구해 결과가 주목된다.



이성운 의원은 전북 청년 인구유출의 심각성을 거론하며 현재의 비자 제도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이 고등학교

졸업 직후 지역 내 취업이 불가능함을 지적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상 취업비자 발급 가능 자격요건 중 하나가 학사 이상 자격 소지자이다. 특성화고 외국인 유학생은 비자 발급이 불가해 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이 의원은 외국인 유학생이 도내 특성화고 졸업과 동시에 기업에 취업하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새로운 출입국·이민정책을 촉구했다.

또, 새롭게 설립되는 전주교도소가

체육관·운동장·각종 운동시설 등 주민개방시설을 갖춘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법무부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성운 의원은 "새 전주교도소가 체육시설을 두루 갖춘 주민 개방시설이 될 수 있도록 장관이 관심을 갖고 전주 시민들과 소통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에서 더욱 소외된 전북도민의 자긍심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전주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만호 기자

여전한 '서·오·판' 득세... 지방대 출신 헌법재판관 8.4% 그쳐

(서울대·50대·판사)

서울대 출신 74.5%로 압도적 1위, 지방대 출신은 8.4%

판사 출신 84.7% 육박, 재조 경력 없는 변호사 출신은 1명

헌법재판관 임명 당시 40대는 이정미·이미선 등 2명

역대 헌법재판관 59명 중 서울대 출신 재판관이 44명으로 그 비율이 74.5%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부터 서울대 출신·50대·판사 출신(일명 서·오·판) 집중으로 다양성 부족이 지적되어 왔지만, 재판관 구성 기준에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실(비례)이 제공한 역대 헌법재판관 출신 분석 자료에 따르면 역대 헌법재판관 59명 중 서울대 출신은 44명(74.5%)인데 반해 비수도권 대학 출신(조선대·전남대·경북대 각 1명, 부산대 2명)은 5명(8.4%)에 불과하다. 심지어 역대 헌법재판관 8명의 경우 모두 서울대 출신이다. 현 헌

법재판소 구성원 중에서도 비 서울대 출신은 이정진(성균관대), 이미선(부산대) 재판관뿐이다. 판사 출신 편중은 더했다. 역대 헌법재판관 59명 중 판사 출신 헌법재판관은 50명(84.7%)이다. 검사 출신 재판관은 8명(13.5%)으로 명목상으로나마 겨우 뒤를 따랐고 재조(在曹) 경력 없는 변호사 출신은 이석태 헌법재판관 단 1명(0.17%)에 그쳤다. 역대 헌법재판관 장 통계에서도 판사 출신은 검사

출신의 안창호 소장이 유일했다.

헌법재판관 임명 당시 나이가 50대 이상인 헌법재판관은 무려 57명(96.0%)에 달했다. 헌법재판소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헌법재판관은 경력 15년 이상, 40세 이상부터 임명이 가능하지만 정작 40대에 임명된 사람은 이정미(49), 이미선(49) 재판관 두 명에 불과하다.

조배숙 의원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서·오·판 편중 현상에 대한 지적은 수년째 이어져 오고 있지만 가장 최근에 임명된 김복형 헌법재판관마저 서·오·판에 축적된다는 건 아쉬운 지점"이라며 "다양한 경험과 세대가 어우러진 헌법재판소가 된다면 격동의 시대에 다양화된 재판 유형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만호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내가 누군지, 왜 입양됐는지 알고싶어요"

입양인 입양정보공개청구 증가

3년 사이 2배 늘어... 95%가 해외 입양인 친생부모 인적사항 공개 동의율은 16.4%

입양인의 입양정보공개청구가 늘고 있지만 상당수는 친생부모 의사조사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실(남원·장수·임실·순창, 국회 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의 입양인의 입양정보공개 청구 건수가 2021년 1,327건에서 2023년 2,717건으로 3년 사이 2배 증가했지만, 친생부모의 인적사항 공개율은 3년 평균 16.4%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입양정보공개를 청구한 입양인 6명 중 1명만이 친생부모 인적사항이 담긴 입양정보를 알게 된 셈이다.

부를 우편으로 확인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현행 입양특례법은 제36조 제3항에서 친생부모가 사망한 경우라면 양자가 된 사람의 의뢰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입양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예외적 공개 사유가 지나치게 엄격하여 아동권리보장원이 해당 법규에 근거하여 입양정보를 공개한 사례는 전무(全無)하다.

한편, 최근 3년간 소재지가 파악되었으나 사망하여 친생부모의 의사를 묻지 못한 경우는 391건(6.4%)에 달했다. 친생부모 사망으로 친생부모의 개인정보보호 실익이 없거나 의뢰적 필요성이 있음에도 친생부모 입양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박희승 의원은 "입양인의 친생부모를 포함한 입양정보는 친생부모의 개인정보인 동시에 입양인의 개인정보이자 알 권리의 대상이다. UN아동권리협약은 모든 아동은 자신의 친생부모를 알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입양인의 친생부모에 대한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해 아동권리보장원은 친생부모 인적사항 공개 동의 절차를 우편 방식에서 전화 방식으로 개선하는 등 입양인의 알 권리를 두터이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국회 환노위, 오늘 새만금 현안 점검

안호영 위원장, "새만금에 새로운 활력 불어 넣겠다"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장(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 사)는 14일 환노위 소속 위원들과 함께 국정감사를 위해 전북을 찾는다.



새만금 사업 예산확보와 안정적 추진을 위해 안 의원은 국회 환노위의 국감 중 유일하게 현장 국감을 전북완경청에서 실시하고, 이날 오후 새만금 현장을 방문해 전북도의 환경부 국가 예산 요구 및 주요사업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새만금의 차질 없는 사업 진행을 위해 수질개선 방안과 전북 혁신도시 악취 문제, 이차전지 특화단지 전용 폐수처리장 신설 같은 현안도 깊이 있게 다뤄질 예정이다.

안 의원은 "여야가 함께 현장을 찾는 의미 있는 자리가 마련된 만큼 새만금 내부개발, 환경생태용지 조성 등 핵심 사업들의 예산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여당에도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해 새만금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말했다.

이날 시찰은 새만금 33선터를 시작으로 환경생태용지 조성 현장을 둘러본 후, 전북 혁신도시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김제 용지 현업측사 매입사업 현장을 점검하는 일정으로 진행되며 주요 현안 설명 및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김관영 도지사와 전북 지자체장들도 함께할 예정이다.

안 의원은 "새만금은 대한민국 최고의 친환경 에너지 투자처로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이다"며 "새만금 예산의 완전한 복원과 사업 정상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도의회 의원 2명, 조례안 발의 잇따라

염영선 도의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조례안 대표 발의 최형열 기획행정위원장, 인구정책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명이 조례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나섰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더불어민주당, 전주)도



염영선 도의원 "전북특별자치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제정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행정의 책

임성, 대응성, 신뢰성을 높이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에 있다.

최형열 기획행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주)도 11일 제414회 임시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은 인구영향평가 실시 근거를 마련해 정책 실효성을 높이고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에 있다.

/이만호 기자